

기고



한정길 호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NO화재, YES안전 전통시장을 위하여

전통시장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소포 공간이다. 알뜰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보수 또는 정비에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해 화재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전국 전통시장 소화설비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자료에 따르면 소화기 약 57%와 스프링클러 약 11%의 설치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동화산소화장치의 경우에는 무려 약 82%가 불량하거나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인 요인'이 무려 45%를 차지했다. 그중 배선불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그밖에 노후차단기와 콘

센트 등이 그 원인을 이었다. 더욱이 누전차단기를 일부러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소방도로 역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등 화재에 취약한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모두가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시장 내에서 전기난로, 장판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해야 한다. LPG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이상 유무를 점검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시설을 합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한 전기배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시키는 안전의식이 변화돼야 한다. 둘째, 소화설비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와 내용 연수 확인·교체, 비상소화전함 관창, 소방호스 정비, 화재탐지 자동설비, 비상조명, 가스용기 관리, 차단기·경보기 설치 여부, 누전차단기, 배전판 등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시장통로 내 소방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물 이동·제거해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초기 진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꾸준한 교육과 자율 소방대 조직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항상 유지하고 소방시설 사용 요령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넷째, 시장 내·외 불법으로 주

차와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소방관에서 초기 출동 시 시장 내 도로의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장애물을 없애고 수시 점검해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화재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공제 가입률이 저조하다'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받지 못한 점포가 85%에 달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1.6%로 낮은 수준이다.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안을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서와 지자체는 화재공제 가입 조례 제정과 화재보험 가입 홍보에 나서야 한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를 진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고 전통시장 관계인들도 안전이 최고의 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방화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통시장의 관계자와 소방서가 함께 노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이 넘치는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

사설

고향가는 발길 이번만은 참자

민족대동이 시작되는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다. 고향 부모·형제들과 만날 기쁨에 들뜬 추석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을 자제하지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참이 절실하다. 현재 광주는 며칠째 한자리수 확진자를 보이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의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한 일가족 16일 밤사이 4명이 가족 간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족 간 전파에 따른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 보건당국은 가족의 경우 의식주를 같이 하는 생활 특성상 전파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가족과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밀접 접촉하기 때 문이다. 실제로 가족 간 감염이 또 다른 감염원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8월 순천에서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해 보름여 동안 무려 63명이 감염된 것도 첫 확진자인 70대 여성이 감염된 후 아이들에게 퍼지면서 비롯됐다. 서울 서초구 딸 집을 방문한 60대 여성이 광양에서 6명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파한 것을 비롯

해 다른 지역 자녀나 부모 등을 만난 후 전파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선부른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광복절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초래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일년에 한번 맞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아 부모·형제와 친척들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동참이 적극 요구되는 것이다. 자칫 순간의 방심이 공멸여 쌓여가고 있는 방역의 뚝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 간 전염 비율이 비가족 간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70대~80대 이상 고령층 사망률이 전체 사망자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타지역보다 고령 비율이 높은 전남의 경우 매우 위협적이 아닐 수 없다. 설마 하는 방심이 온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특히 노부모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5일이야 되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고향 방문 자체가 효도라는 생각으로 이동을 자제하되 부모나 친척, 친지들과 영상통화나 정을 나누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자격자 렌트카 차량대여 시스템 보완 시급하다

최근 일부 고등학생들이 무면허 상태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야기하거나 추돌 사고를 내는 사례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사회 일각에서 우려와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상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수많은 렌터카 업체가 산재해 있어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바로 차량을 대여 받을 수 있어 꾸준한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운전면허가 없는 10대들이 습득한 타인의 면허증을 사용해 차량을 렌트하거나 지인의 렌터카를 빌려 운

전을 하는 등 허술한 신분확인에 업체의 관리시스템 부재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을 보더라도 지난 2005년 97건에 불과하던 렌트카 관련 사고가 2019년에는 4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특히 미성년자에 의한 렌트카 사고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에는 1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에는 면허증만 있으면 별 의심없이 쉽게 차를 빌려주는 일부 렌터카 업체의 구조적인 문제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칫하면 렌트카 도난과 대여자 각종 범죄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물론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서는 렌트카에 위성위치확인 시스템을 부착해 놓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전문가를 동원해 강제로 떼어내면 차량의 위치확인이 어렵게 될 수도 있어 충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는 없다. 무자격자에게 차량을 빌려줄 경우 물론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빌려준 사람에게도 범죄 방

조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차량을 빌려줄 일만은 아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우려는 별도로 하더라도 최근 범죄가 기동화 광역화 되는 추세에서 여러 가지 파생문제점을 낳고 있는 렌트카 대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렌터카 대여가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운영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체 나름대로 렌트카 대여절차 강화 등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 재정비 등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김덕형/광성경찰서정보보안과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